

나군의 거친 생각 트럼프의 모험

들어가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려질 것이다.”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언제쯤 그의 “미국 우선주의”를 실감할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지난 3월 1일 그 진면목이 드러났다.

3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왜 위험한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뤄보려고 한다.

트럼프의 모험

지난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철강업계 최고 경영자 간담회에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주 목표는 중국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과 함께 ‘3대 경제권’을 이루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은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잡음이 잦아들기도 전인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은 제외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령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수입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조치 서명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품목들에 보복관세를 검토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중국도 피해를 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대미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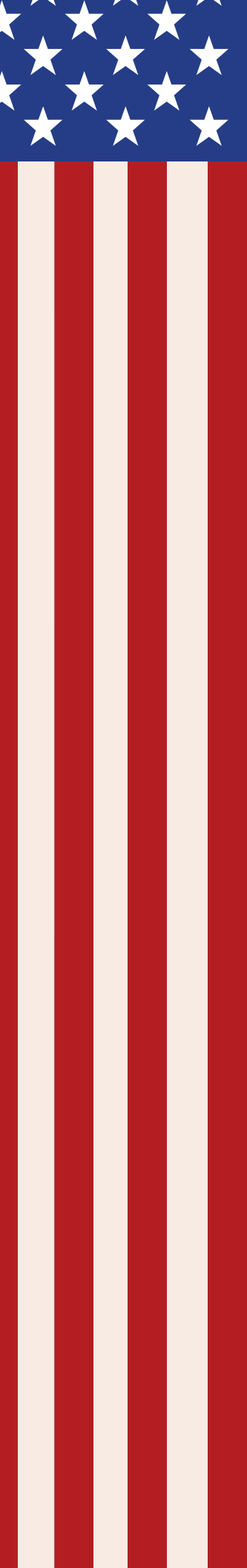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는 교역 상대국들은 물론, 나라 안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미국 경제 사정이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 등 거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하층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정체 등으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정강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폭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백악관 및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제품을 사용하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던 ‘통상 온건파’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사임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행정명령 이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부과계획의 '재고'를 요청했다. 더 나아가 3월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입법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지지를 보내고, 공화당은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상황으로 인해 야당인 공화당이 분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당장 미 뉴욕 증시가 직격탄을 맞아 밤사이 급락했고, 재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이번 관세 방침은 분명 잘못된 길”이라며 “상대 국가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꼴”이라고 표현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를 해치게 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긍정적 효과들을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도 철강 관세 비판에 가세했다. 우즈 최고경영자는 미 CNBC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루치스 샤르마 JP모건 신흥시장 주식담당 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가장 큰 공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관세전쟁을 촉발해 대공황을 일으킨 1930년대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 5년간 2570억 달러 인프라 투자(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미국 경제	· 성장률 3.5%/10년간 2500만 명 고용 창출	
· 미국 고용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역 협정에 반대 · TPP에도 동일 기준 적용	무역	· 미국 우선 무역협상 · 국익 보호하지 못한 무역협정 거절 · TPP 반대, NAFTA 재협상 추진	
· 오바마케어 단점 보완	의료보험	· 오바마케어 폐지	
· 버핏세 도입 및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 세율구간 신설 · 석유 가스 대기업에 대한 세계해택 철폐	세제	· 법인세율 35% → 15로 · 최고 소득세율 33%로 인하	
· 동맹 강화/외환시장 개입에는 부정적	한국/일본	· 주둔 미군 비용 전액 부담	
· 제재 강화/한국일본과 방위협력 강화	북한	·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	
· 불공정한 무역관행 대응 조치 · 센카쿠열도 도발에 반대	중국	· 환율조작국 지정 · 동남중국해에서 미군 전개 강화	
· IS 괴멸 위해 동맹국과의 광범위한 연합 주도	테러대책	· IS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 · 테러 관련국에서의 이민 금지	
· 핵합의 지지	이란	· 핵합의 파기할 것	
·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 지지	이민	· 멕시코 국경에 장벽 · 오바마 정부의 불법 이민자 사면 철회	
· 총기 규제 강화/살상 능력 높은 무기탄약 유통 금지	총기 규제	· 개인이 무기 가질 권리 지킬 것	
· 기후변화는 즉각적인 위협 · 10년 내 에너지원 50% 청정에너지로	환경	· 국가 안보 문제와 거리, 화석연료 개발 확대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불사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비교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 정책은 주로 한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유치산업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없을 때 시행하는 정부의 무역 정책이다. 보호무역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관세를 이용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 장벽'과 품목 제한, 수입량 제한, 과징금 부과, 담보금 부과 등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 장벽'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새로운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 억제 효과를 노리는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관세 장벽'이다.

보호무역 자체는 분명 중립적인 표현으로 잘잘못을 따질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듯, 보호무역의 이면은 무역전쟁이고, 무역전쟁의 종국은 재앙이곤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호무역이라는 단어보다는 무역전쟁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무역전쟁의 역사

현대 무역협정의 시초는 영국과 프랑스가 1860년 맺은 '콥든-슈발리에 협정'(영불 통상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율의 대폭 인하였다. 덕분에 1860년대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공산품과 와인을 상대국에 2배 더 수출할 수 있었다. 콥든-슈발리에 협정은 프랑스가 '멜린 관세법'을 통해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서면서 1892년 파국을 맞는다.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영국의 보복 여파로 결국 프랑스 식품 물가는 25% 이상 올랐다고 한다.

1871년 통일을 이룬 이탈리아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호무역에 나섰다. 프랑스와 맺은 무역협정도 1886년 파기했다. 프랑스 경쟁업체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물렸고 프랑스가 맞불을 놓으며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무역전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이 급감했다. 모두 대가를 치른 셈이지만 예상치 못한 역효과도 일어났다. 이탈리아가 프랑스 대신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가까워지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의 한 축인 3국 동맹을 이룬 것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도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였다.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집권한 공화당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게 발단이 됐다. 1866년에는 캐나다와 맺은 호혜조약을 폐기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며 새 호혜조약을 맺자는 캐나다의 제안을 일축했다. 캐나다도 1879년부터 보호무역을 본격화한다.

미국 공화당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갈수록 짙어졌다. 1890년에는 '맥킨리 관세법'을 제정해 모든 수입 제품의 평균 관세율을 38%에서 49.5%로 높였다. 캐나다도 보복 수위를 높여 1889~92년 미국산 농산물의 캐나다 수출이 반 토막 났다.

미국이 1897년 '딩글리 관세법'으로 평균 관세율을 더 높이자 캐나다는 보복관세로 맞서는 동시에 영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은 이후에도 지속해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까지 거의 한 세기가 걸렸다.

미국 허버트 후버 행정부가 1930년 제정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전면적인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황을 가속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당초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의원들의 요구로 관세품목이 2만여 개로 늘었고 1921~25년 평균 25.9%였던 관세율이 1932년 59.1%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항하여 캐나다는 영국과 합동으로 대미 보복관세 조치에 나서는 등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은 관세율 인상, 수입제한, 환율 통제 등으로 보복에 나섰다. 이 결과 국제무역과 함께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다. 1929년부터 경기가 바닥을 친 1933년까지 미국의 수입과 수출은 각각 66%, 61% 줄었고, 1930년 8%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1932~33년 25%까지 치솟았다. 세계 무역 규모는 1929~34년 66% 쪼그라들었고,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1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다행히 1930년대 이후 더 큰 무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1980년대 초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를 문제 삼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타이어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무역분쟁일 뿐 무역전쟁 정도는 아니었다. 역사적 교훈을 통해 전 세계가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이어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로 자유무역질서를 떠받친 덕분이다.

승자 없는 전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최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무디스는 무역 감소,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보복관세 등을 매기지 않을 때와 견주어 2년 동안 일자리가 690만 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가 행동에 나서면 미 성장률도 보복관세 직후 급격하게 낮아져 미 경제가 무역전쟁발(發)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성장을 하락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뒤에나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계 금융그룹인 바클레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한국과 EU, 중국,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20% 정도 더 물리고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미국의 국민소득은 2.3% 정도 줄어든다. 반면에 EU 등에선 0.5% 정도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 은행의 스티븐 야콥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1년 안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70%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무역전쟁의 결과는 재앙일 뿐 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는 FTA와 같은 양자협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양자협정이 없다면 관세에 있어 서로에게 최혜국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긴다면 WTO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WTO 체제를 무시해가면서 보호무역 기조를 취하면 당장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으나, 교역상대국도 호구가 아닌 바에야 보복관세 조치를 하게 마련이고, 결국 보복의 악순환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WTO 체제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세계 경제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마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제조업 백인 노동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그의 교육지책이 이미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던 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접전 끝에 공화당 후보를 눌렀다. '철강 도시' 피츠버그 지역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인 이 지역의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노동자들을 병풍처럼 둘러 세운 채 수입 철강 관세 명령에 서명했고, 공화당 후보를 위해 해당 선거구로 날아가 지원 유세에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이기에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3월 10~14일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pm 2.95\%$)에 따르면 50%의 응답자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원한다고 답했다. 공화당의 의회 지배를 원한다는 응답(40%)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결국,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또 한국 경제도 침체하기에 십상이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 한국 경제는 중병에 시름시름 앓게 생겼으니, 미국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생겼다. 🇺🇸

참조

트럼프의 모험 - 트럼프 관세폭탄에 전 세계 발칵...무역전쟁 일촉즉발 / 연합뉴스 / 신유리 기자

- 마침내 터진 트럼프 '관세폭탄'...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 / 연합뉴스 / 이승우 특파원

- 美 공화당, 대통령 무역권한 제한법안 추진 / 아시아경제 / 김은별 특파원

- 공화당 "공범 될 수 없다...무효화법 제출" / 매일경제 / 황인혁 특파원

무역전쟁의 역사 - 무역전쟁의 역사... "결과는 재앙뿐이었다" / 머니투데이 / 김신희 기자

- 무역전쟁(Trade War)은 왜 세계경제를 무너뜨리나 : 보호무역의 경제학 / steemit / euijin

승자 없는 전쟁 - 교역 위축돼 2년 안에 미국 일자리 690만 개 사라져 / 중앙일보 / 강남규 기자

마치면서 - 트럼프 텃밭서 민주당에게 졌다 / 조선일보 / 정지섭 기자

- '철강 관세 폭탄'에도 美중간선거 표심 민주당에 기울어 / 브릿지경제 / 김수환 기자